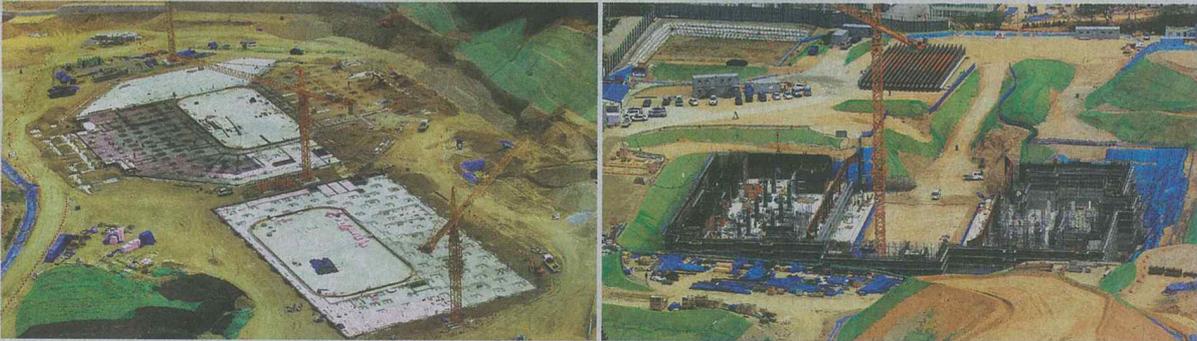


경기장·예산 한 치의 오차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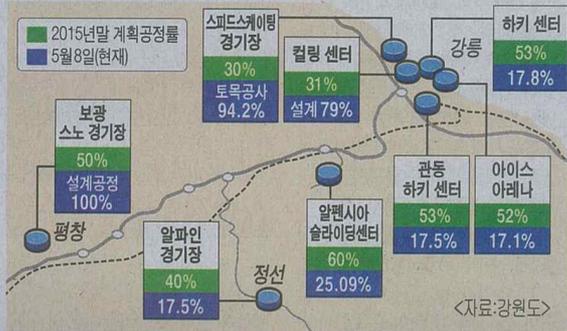
◇2018 동계올림픽이 1,0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4일 아이스하키 경기장의 강릉 하키센터의 공사(사진 왼쪽)가 한창이다. 강릉 하키센터의 현재 공정률은 17.8%다. 사진 오른쪽은 피겨·쇼트트랙 경기가 열릴 강릉 아이스 아레나 공사 현장 모습. 아이스 아레나의 현재 공정률은 17.1%다.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000일을 이틀 앞둔 14일 대회 준비 점검 회의를 열고 신설되는 6개 경기장 모두를 2017년 말까지 완공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노보드 경기장 등 대회 핵심시설 일부의 차질이 우려(본보 14일자 1·3면 보도)되는 등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새로 건설하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을 2017년 말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이들 경기장은 17~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보완되는 스노보드, 컬링 경기장 시설을 국제경기 기준에 맞게 보완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지속된 분산개회 및 개최지 이전 논란, 예산 감축 논란 등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준비의 핵심인 경기장 건설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졌다. 이에 따라 G(GAME)-1,000

평창올림픽 G-1,000 (상) 경기장·SOC

■ 경기장 공사 진척도



신설 6곳 17~26% 공정률... 건설비 논란 없어야 정부 점검회의 “성공 대회 완비 준비에 최선”

일 부터는 한 치의 차질과 논란도 허용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준비 차질이 빚어질 여지는 아직 남아

다. 경기장 건설비용이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기 때

문이다. 경기장 총 사업비는 당초 6,993억원에서 지난 3월 승인된 총사업비 1차 조정으로 7,600억여원으로 늘었다. 이어 지난달 승인된 2차 조정 시에는 8,200억여원이 됐다. 도는 최근 200억여원 증액 규모의 ‘총사업비 3차 조정’을 신청했다. 총사업비 조정은 앞으로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신청 당시의 예상비용과 시설 실시설계 완료 이후의 사업비 차이 때문이다. 이는 IOC 등의 대회시설 보완 요구가 요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이날 회의에서 7개 기업과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해 목표액 8,530억원의 42%인 3,620억원을 후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계조직위는 직원을 298명에서 578명을 늘려 876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와 동계 조직위는 G-1000일인 16일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문화·관광올림픽’ 열기를 확산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즉각 시행하라”

(3억 미만 → 10억 미만)

전문건설업 건설법 개정안 관철 촉구... 종합건설업계 우려 일축

속보=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종합건설업계가 반대(본보 지난 11일자 9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문건설업계가 개정안 관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4일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전문업체 간 영업범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최근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그

동안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업역 갈등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돼도 제도 운용실적, 발주자의 공사 발주 및 관리 편의성, 종합건설업에 대한 선호·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종합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및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 등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방안이 확정되면 공사 도급 단계 축소로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발주자의 선택 기

회가 확대된다”며 “특히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건설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평창올림픽 전략상품 발굴 지원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도는 오는 20일까지 ‘평창 세계인의 축제-전략상품 발굴·육성 지원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지원 과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 1,500만원 한도로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원선영기자

신설경기장 올 연말 공정률 30~60% 목표

평창선수촌 지원방안 타결 오는 7월 착공

진입도로 총 16개 노선 계획대로 착착

추진계획과 전망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6일 G-1, 000일을 맞는다. '세계 스포츠 4대 빅 이벤트' 중 하나인 만큼 대회 준비에도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도와 동계조직위는 대회 준비 동력을 크게 떨어뜨렸던 분산개최 논란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공 개최 준비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신설 경기장 6곳 올 연말 공정률 30~60% 목표=2018년 2월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사용될 경기장은 모두 13개다. 중봉 알파인, 평창 슬라이딩센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아이스아레나(피겨·쇼트트랙), 강릉 아이스하키 I, 강릉 아이스하키 II 경기장 등 6개는 신설된다. 평창 스노보드와 강릉 컬링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 사용한다. 평창 스키점프와 평창 바이애슬론, 평창 크로스컨트리, 평창(보광) 프리스타일, 평창(용평) 알파인회전 경기장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

신설되는 6개 경기장 중 재설계되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 8일 현재 17% 이상의 총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빠

른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의 공정률은 25.09%다. 슬라이딩센터 트랙과 냉동플랜트·실내 아이스 스타트 훈련장은 올해 12월 완공된다. 내년 2월에는 예비인증, 10월에는 국제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문제가 예상되는 경기장은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이다. 늦어도 이달 초에는 착공해야 내년 2월로 예정된 1차 테스트이벤트가 가능하지만 착공은 오는 7~8월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스노보드 경기장 보완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별목 및 토목공사 우선 시공, 야간 공사 강행 등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평창 선수촌 오는 7월 착공=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난항을 겪었던 평창 선수촌(숙소)은 지난 3월 대회 지원위원회 이후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기반시설 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이 원만히 마련돼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사업자인 (주)용평리조트와의 협약이 완료됐으며 오는 7월 착공

될 예정이다. 평창 선수촌에는 1,100억원의 민자가 투자되며 592세대 규모로 2017년 9월 완공된다. 각각 1,780억원과 3,150억원의 민자(LH)가 투자되는 강릉 선수촌과 미디어촌도 올 하반기에 착공, 2017년 9월 완공 예정이다. 건축연면적 4만6,000㎡ 규모로 알펜시아에 들어설 국제방송센터(IBC)는 다음 달에 설계가 완료되며 2017년 4월 준공된다.

■경기장 진입도로 순조=평창과 강릉, 정선 등 3개 지역 경기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는 모두 16개 노선이 공사 또는 설계 중이다. 지방도 456호선 간평~황계 구간이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54.4%의 공정률로 올 연말에는 80%를 기록할 전망이다. 진부IC~호명교, 강릉역~경기장 등 7개 노선은 현재 설계 중이다. 경기장과 달리 도로 시공은 도와 업체들이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차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규호기자

부동산 훈풍에도 '5%대' 증가는 무리?

정부 올 건설투자 전망 하향조정 가능성 커져

1분기 0.7% 증가 그쳐
비주거용 건물 둔화 지속
3%선으로 수정될 듯

올 1분기 건설·부동산시장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이 3%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건설투자 전망치를 3%대로 유지한 가운데 당초 5%선의 증가를 예상했던 정부도 경제전망 수정을 앞두고 예측치의 하향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건설투자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기재부는 작년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을 5.2%로 내다봤다.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주거용 건물의 개선세가 확대되고 토목건설 부진도 다소 완화되면서 건설투자가 5%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올 들어 건설투자는 정부의 전망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로 0.7%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둔화가 지속됐고 토목건설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 속도가 늦어지면서 지난 2월까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작년 4분기(-1.5%)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로 반등하기는 했어도 그 폭이 작아 연간 5%대의 증가율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내려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분기 부진과 4분기 세수결손에 따른 SOC 투자 부족분을 만회할 만큼의 수준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전망치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말 건설투자 전망치를 발표할 당시 경제성장률 3.8%를 전제하고 잡은 것이라 기존 전망치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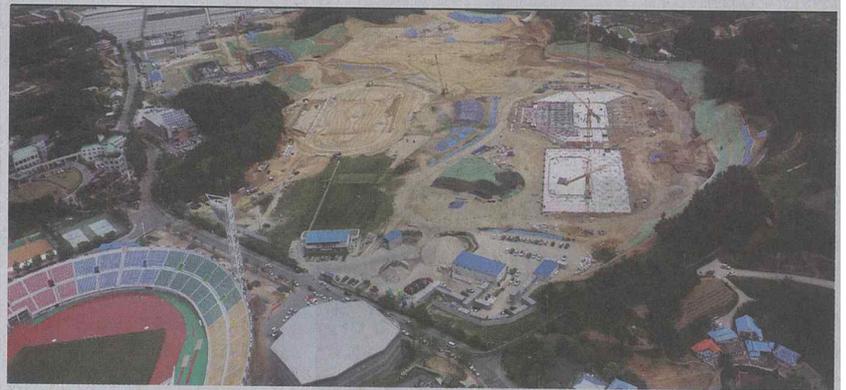
시장에서는 정부가 건설투자 전망치를 3~4%대로 수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국제통화기금(IMF)도 3.3%에서 3.1%로 내린 만큼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폭에 맞춰 건설투자 증가율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점차 토목건설이 살아나고 주거용 건물건설도 호전되면서 건설투자가 회복 기조를 보이겠지만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며 "긍정적으로 예측했던 정부가 전망치를 낮춘다는 건 그만큼 기대요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모습 드러낸 올림픽 빙상경기장 '공사 한창'

2018 동계올림픽이 10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4일 강릉 하키센터(아이스하키1)와 강릉 아이스아레나(피겨·쇼트트랙 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공사가 한창이다. 하키센터의 공정률은 현재 17.8%, 아이스아레나는 17.1%,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토목공사 공정률 94.2%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 과신... 예측치 지나치게 높게 설정

NEWS & 정부, 건설투자 전망치 하향조정 고려 이유는

건설투자 지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투자 전망치 하향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당초 예측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건설투자 전망치는 5.2%로, 당시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연간 건설투자가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2.4%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각각 3.0%, 3.7%의 건설투자 전망치를 내놴다. 상대적으로 높게 잡았던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설

투자 전망도 각각 4.4%, 4.7%로 5%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5%대의 건설투자를 예측했다.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 등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먹히고 당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의 정상화 기조를 뒤집고 올해 전역 확대한 만큼 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정부의 기대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 실제 올 1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보다 30.5% 증가한 7조2160억원에 기록한 이후 2월 떨어서는 전년 동월보다 되려 3.2% 감소한 5조3710억원으로 주춤했다. 3월 들어 11조8320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1~2월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분기부터는 SOC 예산의 조기 집행과 미분양 주택 수 감소, 신규 분양 물량 증가 등에 따라 건설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연간 건설투자 전망치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맞춰 건설투자 전망치를 하향조정 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건설투자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대로 3~4%대로 낮아질 경우 정부는 '정말빛 전망'을 내놴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도 건설투자를 늘리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건설투자의 받들음 가능하겠지만 지난해 전망치로 시장의 기대감이 다소 시그리할 수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 SOC 예산 등을 감안하면 건설투자의 플러스 전환은 맞은 방향"이라며 "그러나 (회복)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어 5%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 전문가 상담코너

Q 당사에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맡겼는데 하도급업체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부들이 당시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하도급 업체 인부들의 임금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까?

A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4조의2, 제44조의3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우선 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귀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등 귀사의 귀책사유로 하도급업체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귀사가 하도급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나 귀사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귀사는 별도 임금 지급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전담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차례 이상 도급이 행해지며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귀사와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의거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민사집행법상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중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고결정 등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의 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따라야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원로노무법인 노무사
연합 노무상담 자문위원



제공 : 대한건설협회·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

3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집계해보니

‘민간’ 지난해보다 184% 꺾춤... 전체 증가세 견인

(10조3745억원)

재건축, 재개발 물량 호조로 3월 건설사들의 민간공사 수주가 크게 늘었다. 반면 공공공사 수주는 건축공사 물량 부족으로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

14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작년 같은 달 7조6464억원보다 88.4% 증가한 14조4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올해 2월 수주액 8조8464억원과 비교해도 78.1%나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민간부문 호조 덕분이다. 3월 민간부문 수주액은 10조374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84.5%나 증가하면서 전체 수주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민간수주 가운데 건축부문에서는 사무

총 14.4조원...88% 늘어 재개발·재건축 호조 영향 공공부문 0.7% 증가 그쳐

용과 학교, 병원 등 비주거용 건축이 저조했지만, 주거용 건축이 활발해 작년 같은 달보다 176.2% 증가한 9조3843억원을 기록했다. 광고·탄현 등 신규 주택은 물론 특히 가락시영 등 재건축과 온천2구역 등 재개발이 3월 수주실적에 포함됐다.

민간토목도 설비투자 증가로 기계설치가 크게 늘었고, 발전 송전배전도 호조를 보이면서 같은 기간 동안 296.7% 증가한 9902억원을 기록했다.



반년 올해 3월 공공부문 수주액은 4조 2769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사종류별로 살펴보면 공공토목이 발전 송전배전과 고속도로 공사가 호조를 보여 같은 기간 동안 7.7% 증가한 2조8898

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공건축은 공공주택 호조에 학교와 병원, 관공서 부문 부진으로 13.6% 감소했다. 수주액은 1조1378억원을 기록했다.

협회 관계자는 "2015년 들어 건설수주는 건설투자 증가,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민간부문을 주축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각종 지표를 통해 보이는 건설경기의 완만한 회복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수익성 확보,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공공 물량 발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6조8000억원)

‘제2경부고속도’ 내년 예산엔 포함될까

국회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빠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의 국토균형발전과 서민생활에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제안 가운데 420여건을 예산안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이들 사업 상당수는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인 데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라 SOC 사업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엮보이고 있어서 20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예산 미반영 사업의 예산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예산 확보가 무산된 국토교통부 사업은 90여건에 달한다.

도로분야 주요 사업에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울산 남소~외동 국도건설, 충남 서천~보령2 국도건설 사업 등이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과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 사업 등도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의 예산 미반영사업도 산더미다.

지난해 대선 공약 포함 SOC사업 420여건 제외

20대 총선 앞둔 정치권 예산 확보 경쟁 치열할 듯

고용부에는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산업재해 의료기술 발전과 산재환자 직업복귀율을 의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3689억원 규모의 울산산재모병원 사업, 미래창조과학부는 1단계 달 탐사 사업 등이 있다.

문화부에는 강원도 올림픽프라자 건립, 산업부에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된 경북 칠곡의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사업, 해양수산부에는 목도 방파제 설치사업과 남극 제2기지 건설 등이 내년도 예산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취합한 뒤 8월 말 대통령 보고를 거쳐 9월13일(법정기한)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인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2015 정부예산 미반영 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요구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6조8000억원	40억원
건설가능한 양성 지원	매년 10억원	10억원
울산 남소~외동 국도건설	1116억원	8억원
충남 서천~보령2 국도건설	1387억원	5억원
강원 춘천~회천 국도건설	2511억원	5억원
경기도 덕평~설악 국도건설	2585억원	10억원
관산~백제 국대도건설	1888억원	5억원
경북 낙동IC~도청신도시간 국도 4차로 확장	2400억원	10억원
비금~추포 연도교 건설	4052억원	10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1002억원	20억원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사업	2조304억원	48억원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건설(대구시 달성~국가산단~경남 창원)	6482억원	35억원
춘천~속초 철도건설	2조595억원	130억원
여주~원주 철도건설	5154억원	130억원
울산산재모병원 건설	3689억원	예타중
1단계 달 탐사 사업	1978억원	-
10·27 법남기념관 건립	1534억원	200억원
강원도 울림픽츄러지 건립	1225억원	233억원
경북 칠곡의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839억원	53억원
자동차 100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8347억원	-
목도방파제 설치사업	4074억원	100억원
남극 제2기지 건설	1067억원	-
울산항(봉황~신항) 진입도로 개설	1971억원	26억원
부산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 설립	452억원	20억원
노후수도시설 개량을 통한 물복지 제고방안	2조788억원	국비 50%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확보 경쟁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강원, 경남,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는 밀착감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원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으며 의원들 역시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당수 사업은 기본·실시계획비나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등이어서 총선을 겨냥한 소규모 예산 확보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업계 의견 대폭 수용해 개정

하도급관리지침·업무중복도율 완화... 일단 한 숨 돌렸다

국토교통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작년 5월 시행 이후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건설기술진흥법'이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업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업무중복도율과 하도급 관리지침을 모두 원안에서 크게 완화시켰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일단 한 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하도급 관리지침의 변화다.

작년 5월 시행 이후 업계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하도급 관리지침은 적용 대상 사업을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발주된 사업이나, 혹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하도급 관리지침
실비정액 가산방식 발주사업 발주처 별도 용역산출내역 제공한 경우로 대상 한정

의 용역 산출 내역을 제공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사비율방식(용역비를 총 공사비의 특정 비율로 산정)'의 사업에까지 법을 적용할 경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인의로 용역산출내역을 만들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을 국토부가 감안한 것이다.

업무중복도율
150·200% 등 만점기준 다양 점수구간별 차등 선택 가능 발주기관 재량으로 공 넘겨

업계는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엔지니어링업체 A사의 임원은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이 개선됐다"며 "실비정액 가산방식처럼 근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업체도 부담없이 용역산출내역을 만들어 발주처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비정액가산으로 발주되는 사업이 전체 물량의 12~15%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도급 관리지침은 유야무야된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용역업계에 최초 도입된 하도급법이 업계의 큰 반발을 이기하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자, 국토부가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용역 쪽의 하도급법 적용을 유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의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관피아법'으로 불렸던 사업수행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중복도율 만점기준도 발주기관 재량으로 공을 넘겼다.

각 발주기관이 용역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발주기관에 3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개입을 멈춘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만점기준이었던 업무중복도율 100%, 150%와 200%, 300% 등 세 가지로 다양화됐고 점수 구간별 차등도 50%와 100% 중에 발주기관이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예시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원하는 대로 업무중복도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국토부가 작년 법안 시행 이후 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건설기술용역 제도개선 합동TF'를 구성해 TF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해 만든 개정안"이라며 "고시된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의 상황을 추적해 조만간 엔지니어링 업계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서 나오는 의견 역시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

업계 의견 수용 배경은

특정 하도급률 정하기 불가능한 업계 특성 감안 기술자 업무중복도율 폭발적 증가... 부작용 속출

하도급법 사실상 유명무실

국토교통부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건설기술진흥법'의 하도급 관리지침 중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받고, 이때 업체는 용역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하도급 계획서를 만들어 발주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자체의 인건비, 제작비용 등이 명확하게 산출되고 공종별 전문 하도급이 분명한 시공과 달리 엔지니어링 파트는 특정 하도급률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발주기관 역시 사업을 발주할 때 용역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신설된 하도급법은 역으로 업계에 산출내역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었다.

결국 업계는 짜맞추기식 임의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뜻지 못한 일도 벌어졌다.

업계가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처가 기피한 것이다. 근거 없이 산출한 내역서에 근거한 하도급 계획서를 승인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처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외주관리 담당 임원들은 전자입찰

위장 계열사, 외주사 직원의 임시고용 형식 등으로 하도급 관리지침을 피하기 위해 갖은 묘수를 짜내기도 했다.

국토부 역시 법 시행 이후의 부작용을 지켜봤고, 이에 따라 법 시행 1년 만에 당초 기준에서 대폭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된 법은 하도급 범위 및 하수급인 자격을 완화했고,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받을 때 제출하는 용역 산출내역서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된 용역이나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을 제공한 경우로 한정했다. 하도급 승인체제도 간소화해 기본 요건만 확인한 후 승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고 부실용역이 우려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전환했다.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은 합리화해 하도급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75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대신 국토부는 도급률이 높을수록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점(1% 상승 시 0.5점을 부여)해 업계의 하도급 지침 준수를 유도하는

우회방안을 택했다.

특히 국토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사업에만 하도급 관리지침을 적용토록 하면서 업계는 이번 하도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발주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조사 용역이 많은 파트를 제외하고는 물량이 거의 없다"며 "국토부가 하도급보다는 외주가 적합한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사실상 유예시켜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무중복도율 만점기준은 발주처 재량 '건설기술진흥법'의 또 다른 핵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의 업무중복도율 만점기준 부분이었다.

업무중복도율이란 사업 책임기술자의 경우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지간 합계를 신규 사업의 용역기간으로 나누어 100을 곱했을 때 나오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작년 건설기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가운데 업무중복도 산정 지침 변화와 더불어 업무중복도율 만점기준을 100% 미만으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무중복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을 뒤집어 책임기술자 외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까지 중복도 평가를 받도록 했다.

중복도 산정 기준이 바뀌자, 기술자들의 업무중복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발주처 자체조사에서는 개정 이후 사업책임기술자들의 중복도율이 평균 563%까지 치솟았고, 업계 자체조사 결과에서는 1375%까지 나오기도 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져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다.

대행사를 중심으로 실적은 만점이지만 업무중복도는 '제로'인 발주기관 출신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입전이 벌어졌었다. 여기에는 국토부 출신도 포함됐다. 그의 기술자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

았다. 업무중복도율이 강화되자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쓸 책임기술자급 기술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인건비 압박에 시달리던 업체들은 '뽕수'로 각 업체 간 기술자 스와핑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기술자가 이직을 하면 이전 사업의 업무중복도도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지며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도 업무중복도율 만점기준을 완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기술자를 많이 보유한 대형사들은 업무중복도율이 지나치게 완화되는 것은 피했고, 중소기업들은 보유 인력이 부족한 만큼 업무중복도율의 대폭 완화를 주장했다.

고심을 거듭한 국토부는 결국 공을 각 발주처로 넘겼다.

업무중복도율 만점기준에 대한 세 가지 예시만 제시하고, 각 발주기관이 용역의 특수성에 맞춰 업무중복도율 평가기준을 자체 산정하란 것이다.

다만, 협회 차원에서 업계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업무중복도율을 산출해 매달 고시하면 이를 발주처가 참조하도록 했다. 업계의 평균 중복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중복도율 만점기준이 설정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최지희기자